

지역대학 명운 달렸다...광주·전남, RISE 공모 '사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부 심사... 최대 200억원 지원 시,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등 수립도, 공유캠퍼스 등 5대 사업 마련 양 시도, 전국 첫 초광역 협력체계

지역 대학들의 명운이 달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정부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모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RISE 심사가 시작됐다. 이달 둘째 주에 서류 제출은 마감됐고, 영상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영상을 통해 교육부의 질문에 답하고 광주지역 대학의 미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RISE는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하고 대학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해 나아가기 위해 상생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사업 중 하나다.

기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 LINC3.0, LiFE, HiVE, 지방대학성화사업)을 통합해 예산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지원 규모는 각 지역별로 대학과 연계한 사업 방식을 정부에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0억원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금의 차이가 크게 나다면 해당 지자체로서는 큰 오점이 될 수 있다. 대학으로서도 더 이상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든 만큼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21일 RISE와 관련해 교육부 지정 승인을 받고 7월 22일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21일 시청 무등홀에서 RISE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광주시 RISE 체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RISE의 기본 비전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업(UP)그레이트'로 정하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창업과 실증의 지식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대학의 직업·평생 교육 확대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또 대학과 소통·협력 확대, 대학 현장에 맞는 세부 과제 마련을 위한 분과위원회와 대학실무협의체 운영 등 수평적 RISE의 사결정 체계와 지식학연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했다.

광주시는 RISE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만큼 선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에 비해 여유로운 상황이다. 이미 지난 2023년 3월 RISE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전남도는 시범지역 선정 기간인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전남테크노파크에 RISE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이를 통해 대학 및 지역경제 산업여건을 파악하고 지역과 대학간의 연계성을 분

석, 핵심분야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대학 자문위원회를 개최, 교육부 시안 제출 이전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3월에는 자율성과 지표 수립 관련 간담회 및 의견조사·위원회, 4월에는 도내 대학과 시군, 연구혁신기관과 20회에 거친 설명회를 개최했다. 10월에는 RISE 계획 작성반 운영 및 대학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해 기본계획 검토에 나섰다.

전남도의 RISE 기본계획은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그랜드(GRAND) 전남 혁신성장 실현'을 목표로 △글로벌 지역 특화 인재양성 △지역 산업혁신 챌린지 △전문직업 평생교육 허브센터 △초연결 공유캠퍼스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 등 5대 프로젝트 기반 15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더불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RISE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초광역 협력체계도 조성했다.

지난해 12월 광주테크노파크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

라이즈 기본계획과 연계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양 시도 대학간 연계·협력사업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국비확보 공동 대응 등을 약속했다.

양 시도 RISE센터는 향후 지역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며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취·창업, 지역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보현 광주RISE센터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고, 여러번의 검토를 거쳤지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15일 열리는 영상 심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광주시로서는 여러 상생 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이 절실한 만큼 지역 대학의 미래와 광주의 발전을 위한 밑그림에 집중했다"며 "많은 노력을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경찰·공수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

국수본, 막판 영장 집행방안 논의 경호처와 3자 회동선 '입장차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광역수사단 지휘부가 14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인천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 소속 총경급 지휘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6명도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

다. 경찰은 조별로 진압, 체포 등 역할을 나눴다. 경호처가 관저 주변에 설치한 철조망과 버스 등 장애물을 뚫는 전략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경찰 인력 1000여명이 투입될 계획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하는 '3자 회동'을 개최했으나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와 경호처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 관련기사 6면 공동취재

HANIL EXPRESS GROUP
HANIL EXPRESS FERRY

완도·제주항로 다시 돌아온 완도 오전출발 카페리

골드스텔라호 취항!

2025년 1월 15일 첫 운항!

최단거리 항로 / 운항시간 2시간 30분

국내 역대 최고급 카페리

완도발 오전 09:20 출항
제주발 오후 16:00 출항

주동채 회장
(주) 송죽레저관광
(유) 현대관광

- 여객정원 948명
- 차량정원 343대 (승용기준)

해외여행, 수학여행, 기업연수, 등반, 단체관광 전문

송죽레저관광 T. 064) 747-8000 F. 064) 747-2590 H. 010-6865-7000

현대관광 T. 061) 245-0091 (목포) F. 061) 245-0309 (목포)